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자치분권 로드맵

왜 자치분권인가?

자치분권의 비전과 핵심전략

자치분권의 효과

혁신읍면동 추진



행정안전부

왜 지금 자치분권이냐

분권화를 통해 243개 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고 해결을 추진합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新성장동력이 부족합니다

11년째 국민소득 3만불 미달성, 재2의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 필요

※ 국민총소득(GNI) : '06년 2만7956불 → '11년 2만4,226불 → '16년 2만7,576불

- 00군 차드 테마 특화 정책: '16년 축제관광객 21만명, 경제적 파급효과 약 2,000억원
- 포항스모로도 와인: '15년 38개 와인터미널(200명) 설치, 매출액 43억 유로 달성

주민 수요에 민감한 확일화된 공공서비스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00군 세모녀 3명 자녀지만...
‘세모녀별 심폐·사각지대 안전
관리사업’을 실시합니다. ‘평생찾아 가는 찾아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세모녀 안전 관리사업’을 실시
합니다. ‘세모녀 안전 관리사업’을 실시합니다.”



【00군 세 모녀 사건 (한국일보) '17.2.10】

【자치단체 공공서비스 사례】

촛불정신으로 표출된 국민의 참여욕구에 부응하여야 합니다

“국가 중심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대전환 필요

- 서울시 00구 주민참여예산은 추경세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책적인 타운홀 미팅,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구(區)의 주요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사회적 위기 해결이 곤란합니다

- 전체 시·군·구 중 94곳(97%)
- 전체 읍·면·동 중 1,383곳(40%)
⇒ 30년 내 소멸
(16, 고령정보원)



【인구 지표 변화에 따른 안정 및 위험 지역】

- '17년 국가 행복지수 155개국 중 56위 (UN 세계행복보고서)
- '16년 OECD 국가 중 사회갈등지수 3위 (한국경제연구원 OECD)
- '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저출산 1위 (통계청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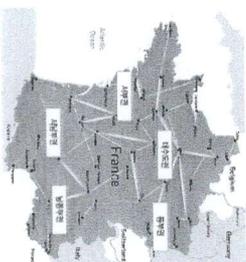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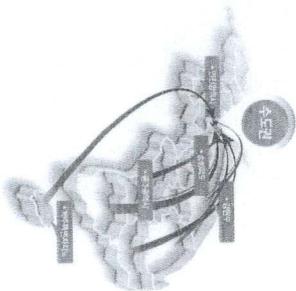
【사회적 위기 심화】

인구와 자별 등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45년 인구의 49.9%(2,551만명) 수도권 밀집 예상('1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생산능력, 문화시설 등 수도권 집중도(통계청)

- ① GDP: 48.7%(‘10) → 49.4%(‘15), ② R&D투자: 64.3%(‘10) → 67.3%(‘15), ③ 문화시설: 64.3%(‘10) → 67.3%(‘16)



【우리나라 수도권 중심 일극(一極) 체제】

【포항스모권형 다극(多極)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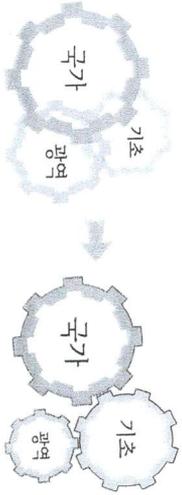
자치분권의 비전과 핵심전략은?

AS-1s

- 국기에 동등한 자치단체
- 행정적 자치주의 실현
- 비판적 자기검열/비판적 자정

10-1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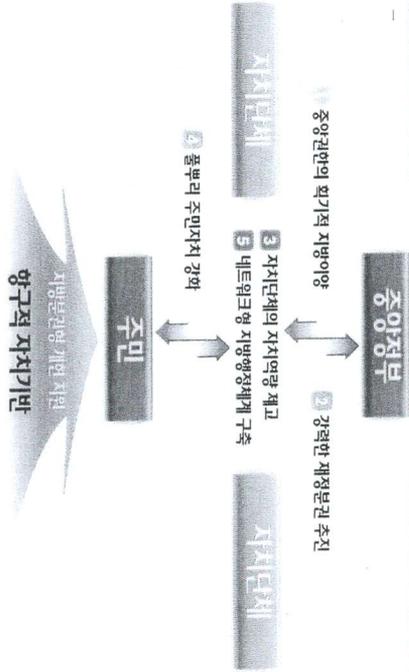
- 국가-지방간 대등한 협력관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자치
- 국가-지방 간 협력의 기반 마련



- ① 합리적 권한 배분을 위해 행정권, 재정사무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정립합니다.
- ② 자치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치행위권을 도입합니다.
- ③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사무를 기능 중심으로 대폭 이관합니다.
- ④ 제도개혁(자치제도인 행정안전법)을 추진합니다.
- ⑤ 자치행위권을 도입하여 행정 권한을 명확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⑥ 국민이 교육개혁을 결정하도록 교육자치 시대를 만듭니다.

비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연방제에 바꾸는 강력한 지방분권



향구적 자치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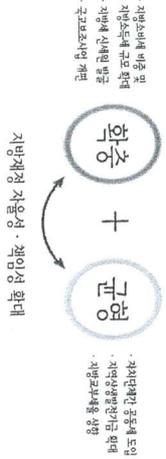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AS-1s

- 국채 발행비율 2%
- 지방비 수도권 배분비율 5%

10-10s

- 국채 발행비율 1.3% 이하
- 지방비 수도권 배분비율 2% 이하



- ① 82년 국채인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합니다.
- ② 행정을 전제로 지역 건 배양(지역별)을 전제하여 위한 균형정책을 마련합니다.
- ③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 지방재정 대응 기틀을 마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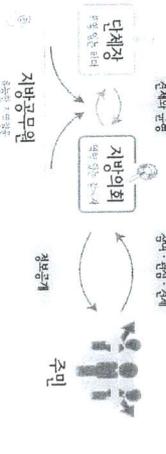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AS-1s

- 시정(자치) 지방(자치)을 이념
- 자치행위권 도입(행정) 비례
- 자치단체 도입(행정)

10-10s

- 자치행위권 도입(행정) 비례
- 자치단체 도입(행정)



- ① 자치행위권의 역할 제고로 집행부 간제 기능을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선합니다.
- ②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③ 저출산, 탄력적 조업운영이 가능하도록 권위를 확대합니다.
- ④ 자치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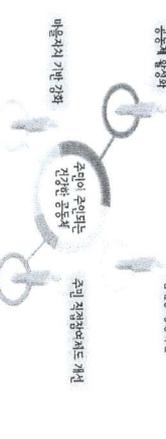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AS-1s

- 주민의 의회 관련 정책결정
- 공정권 유보의 주민참여
- 주민참여 예산제

10-10s

- 주민참여 예산제
- 주민참여 예산제



- ① 성실의 주민자치회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합니다.
- ② 읍면동 행정직원을 추천합니다.
- ③ 마을자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을 지원합니다.
- ④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 참여제도를 개선하여 자정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추진방안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① 지방분권의 원리를 헌법원칙으로 규정하여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정립합니다.
- ② 자치행위권의 규정명칭을 확대하고 기본권 제정의 법률유보 조항 완화를 검토합니다.
- ③ 중앙-지방사무 배분의 원천과 구체적 국가기능사무를 헌법에 규정하는 사항을 검토합니다.
- ④ 지방의 과제주권 해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 ⑤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운영제도 규정을 검토합니다.
- ⑥ 제2국회의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지방 간 효과적인 소통, 협력의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AS-1s

- 행정권 지방의 배분(2%)
- 지방비 수도권 배분비율 5%

10-10s

- 행정권 지방의 배분(2%)
- 지방비 수도권 배분비율 2%



- ① 행정권을 초월한 협력을 위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를 도입합니다.
- ② '광역협력제도'를 도입하여, 도시 네트워크를 건고 합니다.
- ③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협업체대로 비효율적 주민발문을 해소합니다.
- ④ 시회(자치)의 결속(자치)제도를 활성화합니다.
- ⑤ 자치단체간 지역적인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합니다.

자치분권으로 주민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 이웃의 힘든 일상

자치분권 추진

사람이 살 맛 나는 동네

복지



가까운 우리 이웃이 복지서비스대에 놓여있습니다

혁신읍면동 사업으로 맞춤형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담당무원 방문긴호사 등 현장 전문인력 확충
- 현장 밀착형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방문상담 강화



지역사회 복지를 다 함께 책임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완성합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방문 건강 진단 서비스

정주 여건



낙후된 농어촌, 도서지역 등의 주민생활이 불편합니다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립기반을 마련합니다

- 인구감소 등 낙후지역에 사람·공간·일자리 융합 지원
- 마을기업, 마을공방의 창업 등 소득 창출 지원



‘떠나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지역’으로 혁신합니다

강포 마을기업

지역환경 개선

교육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어갑니다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일반지체와 연계·협력력을 확대합니다

- 유아·초·중등 교육을 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 이양
-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강화



맞춤형 교육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좋은 학교

지역회원 맞춤형 교육

치안



여성 1인 가구, 아동, 청소년 등은 동네 치안이 걱정됩니다

자치경찰이 지역사회 구성원까지 민생치안을 책임집니다

-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등 지역적 경찰사무 처리
- 수준높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사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됩니다

구석구석 치안서비스

안심하는 생활치안

혁신을 명명동 추진!



주민대표기구 위상 강화

우리 마을에서는 주민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의 비전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요!

주민대표기구

주민 대표성 확보 + 기능 확대 + 주민 대표기구
 권한 강화 + 사무공간 등 지원



중장기 마을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주민자치센터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생활 위약권 등 수행

마을계획 만들기

우리마을의 특색 · 고유성을 담아 스스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을 민주주의가 확실히 성장하고 있는 느낌

우성군 안남면 마을순환 커뮤니티 버스 운영사례

✓ 의제별급

상기들은 안남면(안남1기~안남4기) 경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행(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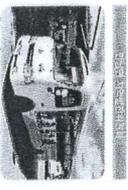
✓ 마을계획 수립

해동 마을별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대표기구에서 버스 운영계획 수립



✓ 사업시행

과동복지센터를 위해 위치지 12마을을 순회하는 버스 운행



“주민중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지역특화마을 조성

우리 마을만의 개성이 넘쳐흐르는 각양각색의 마을로 태어납니다.

- 친환경 에너지 자립 마을 · 한옥마을 · 해변 관광마을
- 농어촌 체험마을 · 농산물 특산마을

신안군 앞면장마을 사례

연매출 35억원, 연 8만명 방문

- 농산물 판매 · 농가레스토랑 운영 · 꽃잔디 축제

건강복지서비스 확대

복지플래너 · 방문간호사 ·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동네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 찾아가는 복지



▶ 건강 · 보건복지



4차 산업혁명! 우리동네 주민센터 구현

4차 산업혁명! 우리동네 혁신 읍면동은 모바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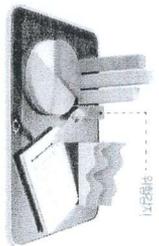
주민참여 시스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 마을총회, 주민대표 주민 소모임 커뮤니티 활동 등



취약계층 위험상황 사전 감지

전기 · 수도 · 통신 시설감량 이·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확인



읍면동 공간혁신

주민들의 만남과 마을활동을 추진하는 장소로 재탄생!

점포가 (Marketplace)

동 주민센터 (Community Center)

주민 (Residents)

주민이 기획 · 설계 단계부터 참여 (읍면동·축협)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내용으로 주민의 필요와 편의를 위한 공간 구현

새로 상설구 응봉동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 (Discovery)으로 활용

다구 수지구 명물동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 (Discovery)으로 활용

주민이 기획 · 설계 단계부터 참여 (읍면동·축협)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내용으로 주민의 필요와 편의를 위한 공간 구현